

1997년 3월 17일 월요일

□ 통일기금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뺑문제로 야기된 통일기금방안

장 일 순
(사회학과 교수)

권오기 통일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통일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일기금설치 의향을 묻는 김아문개 의원의 질문에 “통일비용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재정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며 앞으로 시기가 되면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의 이와 같은 언급은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통일기금 조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정부에 대한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 동안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족 단위의 대량 탈북자 사태와 황장엽 당비서를 비롯한 북한의 당 및 사회의 고위 저명인사들의 잇따른 탈북 및 망명 사건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심각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 예상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여러 차원에



▲통일독일은 통일5년후에야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남북협력 통한 북한경제 회생 절실

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김일성 사망 후 북한 사회는 어쨌든 강력한 지도력 또는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로는 지난 몇 년동안 겹겹이 가물고 폭우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배경은 물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상승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상 혁명과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

국은 빵의 문제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우리가 그저 예상일로 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과 우리의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까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탈북자 및 난민의 수용계획 등이 이미 세밀하게 세워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권 부총리의 통일 기금조성에 관한 발언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통일 대비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고 평가된다.

물론 통일 기금조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데 있어서

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을 모아두는 것보다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통일 대비책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 개개인이 그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며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에는 통일 후 10년간 필요한 통일비용이 2천억~5천억 달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는 4천4백억~1조2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방안 논의될듯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일을 대비한 기금의 조성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이를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90년 통일직후 서독이 통일기금을 긴급 편성해 94년까지 총 1천6백억 마르크(한화 80조원)를 지출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통일 5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독일의 온 국민들은 구동독지역의 재복구를 위해 전소독의 일정한 퍼센트를 기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이 통일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경제력이 높은 잘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5년간 서독이 동독에 쏟아 부은 비용이 2조 5천억 마르크(1천2백80조 원, 1조6천만 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분명해진다.

권 부총리의 이번 발언도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서 나오는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곧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민족공동체의식 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부의 중요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위 정책 담당자 및 실무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좋은 안이 제시되리라 믿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통일 기금 조성의 목적을 통일 후의 비용에 국한시키지 말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서 통일기금의 목적을 더욱 근본적이고 폭넓게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통일비용의 개념을 좀더 넓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EDO와 지원 문제(북한의 경우로 지원 문제)나 북한의 식량지원문제 등도 넓게는 통일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의 확대는 북한의 자금을 최소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도 통일비용에 포함시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일이 통일기금을 조성할 경우 여러 방법 중에서 통일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질 수 있

리라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세보다는 담배나 고급유류 증세 등을 통한 간접세로서 부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일을 심리적인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더욱 근본적인 방안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남북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 및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적극적인 감정을 없애고 민족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단시론

연 점 숙
(영어교육과)



현대를 살며 광고의 집요한 세뇌에 노출되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고막을 찌르는 라디오 광고 방송 세례에, 지하철을 타면 전동차 벽을 도배하듯 다스피 한 광고의 현란한 무언의 외침에, 길을 걸으면 눈길에 닿는 것마다 버티고 있는 광고 자막에 우리의 뇌신경은 피곤하다. 광고 따위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해도 그 엄청난 위력은 우리를 거의 조건반사하게 만든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겹이나 치약 따위를 고를 때에도 소비자는 뇌파에 입력된 광고 이미지의 강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하게 되는 것이다. 광고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파대 포장은 사실과 진실을 은닉한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기에 초등학교 아동이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오답했다는 에피소드에서 광고의 폐해를 새삼 느끼는 것이라.

그러나 광고를 어떤 그대로 믿는 어린이를 웃으며 바라보는 어른들도 광고의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현대인들은 특히 광

물화 사치화를 주도해 나가는 계층이 남보다 더 배우고 더 가진 자의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월드컵 예선 대회에 진출할 만큼 멋진 나라가 되었고 OECD에 가입할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한 나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또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3D직종은 해외인력을 수입해서 쓰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정력식품용 회귀보존동물 시식 여행으로 세계의 물의를 빚고, 여행지에서의 치졸한 호기와 객기로 현지인에게서 질시의 시선을 받는 아픈 기억을 ‘우아하지 못한’ 국민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신의 내면적 외면적 삶이 사자든 생자든 타인의 노동에 아주 많은 빚을 져야 하며 영위되고 있다는 겸손한 교훈을 한 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성숙했을 때 진정한 ‘우아한 품격’이 가능하듯 우리는 헛된 ‘우

거짓된 우아함의 신화

고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어 소비자의 ‘우아한 품격’을 강조할 때 약하다. 그래서 우아한 당선만이 있고, 신고, 기고, 들고, 먹고, 타는 제품 일색으로 거리가 범람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아하고’ 그래서 그 획일성 속에 진정한 우아함은 자리를 감춘 지 오래이다. 그러나 손이 닿는 모든 것마다 황금을 만들 수 있는 마이다스 왕의 축복이 결국은 저주였듯이 물질로 만든 외형상의 우아함은 몹시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서글픈 모습이기 십상이다.

‘우아함’의 허상에 멍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 국가, 세계화의 모든 관계에 깃들여 있다. 우리의 주거 형태가 획일적인 아파트로 변한 후로 중상류층 가정의 우아함은 집사치에 달려 있는 듯하다. 수입 대리석 바닥과 욕조, 이태리 호화 가구로 어우러진 실내의 풍경에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호화 장식 가구에 진열된 비싼 양주병 풍경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위스키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이 ‘우아한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사회적 그들망에서 ‘우아함’의 집착이 혹독히 값을 치르는 곳은 결혼 제도일 것이다. 한번 입고 마는 신부의 드레스나 신랑의 양복 혹은 신부 부케 꽃꽂이 우리 나라보다 더 비싼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한다. 거기다가 혼수 품목의 ‘우아함’의 줄다리기가 결혼 준비 자체를 얼마나 피곤한 신경 소모전으로 만들고 있는가. 많은 경우 이혼의 사유가 혼수 시비에서 시작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마이다스 증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혼수의 속

아함’의 환상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류대 출신자를 비롯한 배운 자는 덜 배운 자에게, 가진 자는 덜 가진 자에게, 문어발의 대기업은 소기업에게, 차를 몰고 다니는 이는 대중 교통 이용자에게, 외제차나 그랜저를 모는 이는 티코나 프라이드를 모는 이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을 모두 가질 때 우리 사회는 거짓된 ‘우아함’의 신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입고 갈 웃인 수의에는 황금을 넣을 주머니가 없다고 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떠나도 몇 백년을 썩지 않는다는 수많은 쓰레기의 방출자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이 하나 밖에 없는 지구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조금은 더 ‘우아한 품격자’가 될 수 있으리라.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황태자’라는 전근대적 용어는 떠나지 않고 ‘내가 입을 열면...’하며 우리를 중 많은 이가 오만불손한 자세로 살아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정치인, 재벌, 학자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우아함’을 가지고 이름없이 빛도없이 각지에서 숨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꽃동네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에서의 자원 봉사자들, 일생 동안으로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우아한 품격자’에의 희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장취재

□ 김형찬군 손해배상소송 2차공판

김형찬군 진실규명의지 보여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308호에서 김형찬군 손해배상소송 2차 공판이 개정되었다. 이 손해배상소송은 안기부법, 납치기 통과 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직권납치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재판에 앞서 지난 2월 14일 개정되었던 1차공판에서 재판부는 안기부측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국가측 변호사에게 관련 안기부요원의 신상자료를 서류로 제출케 하였다.

오전 10시에 개정된 2차재판에는 50여명정도가 참관하였고 김군측은 김동균 변호사가, 국가측은 국가담당 공익 법무관이 담당하였다.

이 재판에서 국가측 변호사는 안기부측의 불법성을 공식

적으로 시인하였으나 관련 안기부요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권영해 안기부장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출두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다. 권 피고인 측은 제출한 서류에서 “김형찬군의 분신자살기도는 자해행위이고, 경기도경으로 인수 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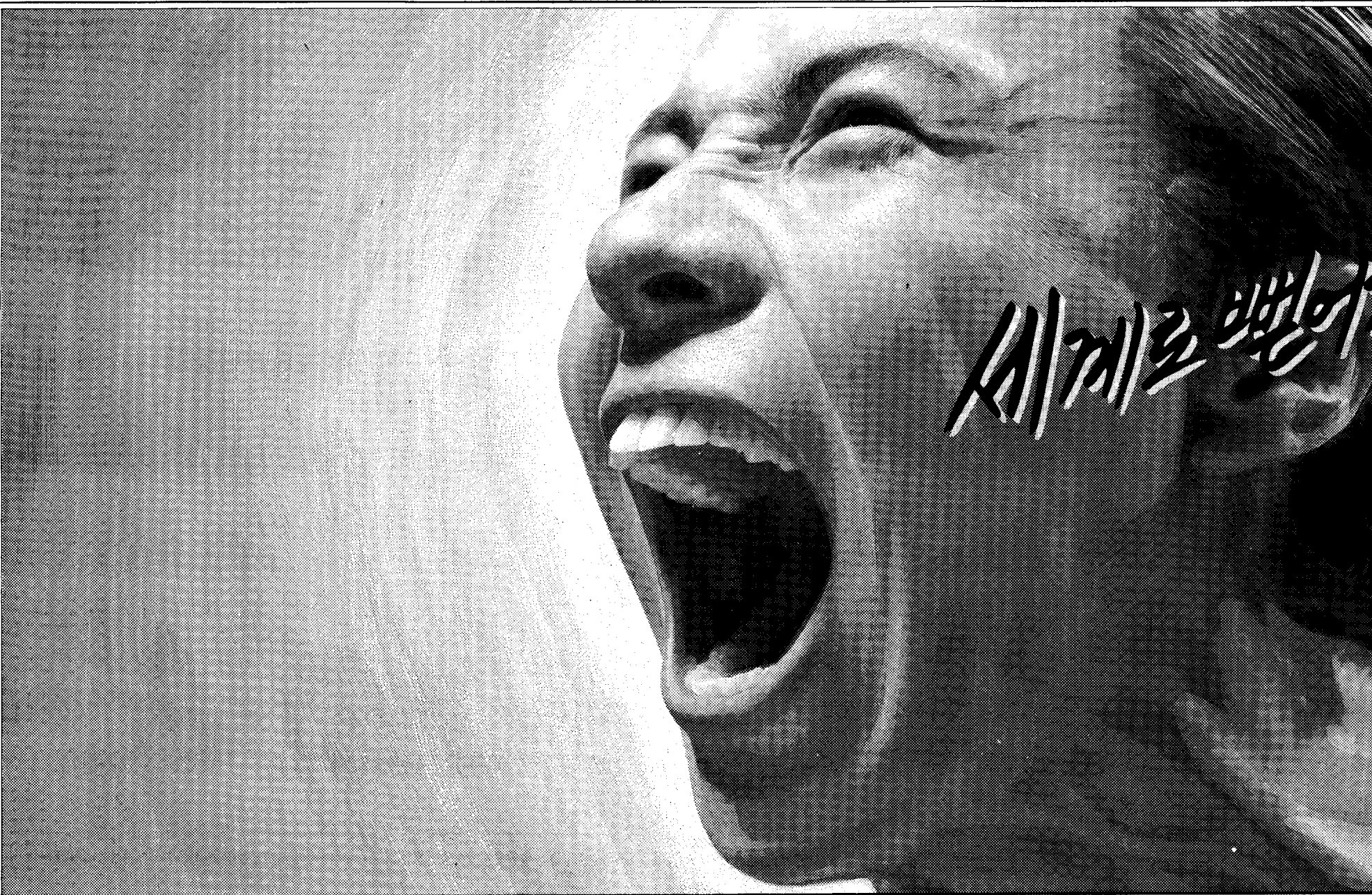
담당 재판장은 “피고가 불법적인 경우 고발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원고측이 내세운 피고인 권영해 안기부장은 고발대상자가 아니다”라며 4명의 관련 안기부요원 신원을 명확히 할 것을 김군측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안기

부요원에 대한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소송의 기각 가능성을 말했다.

이 재판에 변호를 맡은 김변호사는 “안기부 요원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다고 해서 국가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4명의 관련요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무를 빙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는 김군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실규명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김군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여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병하 담당검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용운 기자)



만도가 있습니다

젊은 기업-

만도가

세계속에

당당히

뻗어가고 있습니다

만도기계(주)